

# 안전직결 시공 하도급 금지... '부실공사 제로' 서울 만든다

## 서울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부실공사 발생시 원도급사 재시공 2년간 입찰제한, 업체 목록 공개도 근로자 '기능등급 승급 교육' 지원

서울시가 반복적인 부실 공사로 시민들의 불안감과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서울시장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난 4월 인천 L H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같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위험이 시민 삶과 아주 가까운 곳까지 와 있고, 언제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며 "시는 계획부터 준공까지 건설사업 추진 과정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산재돼 있는지 검토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부실공사 제로'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우선 시는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초강력 제재에 나선다.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원도급사가 즉시 재시공토록 선조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장에서 열린 부실공사 제로 추진계획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

치해 피해 복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한다.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터키 등 대형공사 입찰 참가가 최대 2년간 제한된다. 또 시는 부실공사 업체 목록을 서울시보에 게재해 이들 업체가 민간공사를 수주할 때도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건설 현장에 만연한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 근절을 위해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앞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 공사는 입찰 공고문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주요 공종(철근·콘크리트·교량 등 시설의 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치면서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공종)과 하도급 금지 조건이 명시된다. 기술 보완으로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심사' 대상 금

액 기준을 현재 원도급액 대비 82%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강화, 수수료를 10% 이상 남기는 하도급 계약을 원천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민간 공사장의 관리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기존에 공공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조합이나 건축주가 요청하면 지역건축안전센터(시·자치구)를 통해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를 지원한다.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강우 중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타설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강도를 점검토록 한다.

민간 공사장에서 감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이 일반 건축물의 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감리비는 공공에 예치한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장 근로자의 시공 능력 향상을 목표로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한다. 숙련공이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기능등급별 노임단가 차등 적용을 국토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

해 근로자 현장 투입 전 설계도면 숙지·철근 조립 등 기능테스트와 품질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가격 중심의 입찰 제도도 개선한다.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합제)'의 '기술 이행능력평가 만점 기준'을 상향해 기술 변별력을 확보하고,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는 종합제를 100억원 이상까지도 확대하는 방안을 행안부에 건의한다.

시는 건설 품질을 우선시하는 발주자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보고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가칭)'를 설립하기로 했다. 협회는 공공기관·민간정비사업조합(시행사)·전문가로 구성된다. 시는 발주자가 책임감을 갖고 공사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정보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오 시장은 "건설 산업에 구조적으로 뿌리박힌 관행과 의식 개선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오래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서 선진 건설문화를 정착, 안전하고 품격있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영·호남 민생 살피는尹 대통령 부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을 방문해 미나리를 살펴보고 있다(왼쪽). 김건희 여사는 전남 순천 풍덕동 아랫장을 방문해 나물 및 야채를 구매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 "투기거래 목적 헤지펀드 시장참여 불허"

기획재정부, 외화건전성협의회 내년 1월 시범 운영 후 7월 시행

정부가 국내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투기성 차익을 노리는 헤지펀드의 시장 진입은 불허할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외화건전성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투기거래가 시장을 흔드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내년 1월 시범 운영하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점검하고 추가 조치를 논의했다.

김 차관은 "구조 개선으로 시장 안정성과 대외건전성이 위협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투기거래 목적의 헤지펀드 등의 시장참여는 불허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은행 간 시장 거래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도록 의무화해 당국의 시장 모니터링·관리 기능을 동일하게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외거래 규모에 비해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거래시간도 제약돼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했다"며 "이를 통해 유입된 투기거래 수요가 시장을 흔드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 1997년 도입된) 기존 외환시장 체계가 20여 년간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한 우리 경제에 낡고 불편한 옷이 됐다"며 구조 개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정부는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 간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빚장을 풀고 개장 시간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7월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 외국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진행한 사전 수요조사에 30여 개사가 참여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외화건전성협의회는 외환부문 유관기관의 정보 공유, 정책 협의·조정을 위한 차관급 협의체다. 기재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부담없는 소비위해 물가안정 노력해 달라"

### 방문규 산업장관, 코세페 간담회 '소비위축 타개' 기간 20일까지 연장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를 앞두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유통업계를 만나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행사 기간을 연장하고 할인폭을 크게 키웠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방 장관은 이날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국가대표소상공제,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한채양 이마트 대표, 이제훈 홈플러스 대표, 강성현 롯데마트 대표가 참석했다. 백화점 업계에서는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 박주형 신세계백화점 대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서울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기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가 전자와 자동차 업계에서는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오세기 LG전자 부사장, 정현철 현대차 상무 등이 자리했다.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행사 기간을 오는

20일로 연장했다. 자동차, 가전, 식품, 생활용품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가 펼쳐진다.

대형마트에선 신선·가공식품, 생필품, 레고 등 인기연구 초특가 할인행사가 준비됐으며, 백화점의 경우 패션·뷰티를 중심으로 상품권 증정, 제휴카드 혜택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가전은 여러 품목 구매시 포인트 혜택, 풍성한 경품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며, 자동차는 차종별 최대 17% 할인 등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제공한다.

방 장관은 "최대 17% 할인행사를 준비 중인 자동차 등 제조업체와 신선식품 최대 50% 할인 등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유통업계의 적극적 동참에 감사하다"며 "국민들이 코세페 기간 동안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 두번째)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